

'92 보건의료인

반핵 평화 토론회

일 시 : 1992. 6. 20일 오후 6 시
장 소 : 강실턴 강당
주 최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회빈민의료협의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노동과 건강 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차 례

1. 차 례	1
2. 인사말 권재신 선생(건치 반반분과장)	2
3. 토론회 발제	
1) 국내외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의 방향 황유연 선생(청한)	3
1. 국내외 정세 변화	
2. 합의서의 채택의 배경과 의의	
3. 앞으로의 전망	
4. 통일의 원칙과 방안	
2) 한반도의 비핵군축을 위하여 신은섭 선생(건치)	9
1. 핵무기없는 지구는 요원한가?	
2.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1)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	
2)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3. 한반도의 비핵군축의 길	
3) 보건의료인의 반핵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백한주 선생(인의협)	14
1.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통일활동	
1)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의 모색	
2) 「'90년 한반도의 반핵과 군축을 위한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치면서	
3) 「한반도의 핵무기와 전쟁을 반대하는 '91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치면서	
2.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전망	
1)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전망	
2) 제 3차 IPPNW 아태지역회의 서울개최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지대화를 위하여

권재신 선생(건치 반반분과장)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소연방의 몰락이후 미국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P.K.O.법안의 통과로 다시 이차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군사개입의 길을 열어놓았고 독일도 재무장과 파병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서 현재 지구 오염의 주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각종 환경협약에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연방의 몰락과 더불어 자본주의 진영의 대공세 속에서 보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연방의 몰락과 걸프전에서 승리를 통하여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위치를 굳히고 영향력에 장애가 되는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거슬리는 곳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일련의 요구들은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과대포장에 정부의 강경세력은 이에 편승하여 북한 핵문제의 실상등 북한 관계정보를 과장하는 가하면 일부 언론이 합세해 여론 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통일과 평화라는 우리 민족의 과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만나 미흡하지만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의가 어느때 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외국 잡지에선 통일 후의 한반도의 모습을 선볼리 점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핵무기의 위험성과 전쟁의 방지를 위해 IPPNW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으며 지난 2년동안 두차례에 걸친 반핵평화통일을 위한 보건의료인 대회를 치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단체의 특성에 맞게 활동을 펼쳐 평화통일 의식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아태지역 IPPNW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좋은 선전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준비한 반핵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통일운동의 방향

1. 국내외 정세 변화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통일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세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경제적 체제세계로 분할하여 오던 냉전 체제가 해체와 이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국제 정세 변화의 주요인으로, 기존의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대립구조가 크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냉전의 양극체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실현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등의 국가간의 분할 지배를 통한 불력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85년 고트바흐프 등장 이후 본격화된 군비감축 및 탈냉전등의 정책은 동구권의 몰락과 걸프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형세로 바뀌어왔다. 유럽에서 정치·군사적 힘의 재편과 걸프전을 통한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재편은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구조를 재생산해왔던 미소의 대립체제가 소멸되고, 이것을 대신해서 미일 패권 체제가 부각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과 조류는 동북아 정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북한등 여전히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정치 군사적 힘의 우위를 견지하면서, 단절과 봉쇄가 아닌 길들이기를 통한 포괄전략으로 국제 질서 재편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재편의 움직임은 그간 적대 관계에 있던 한-동구 사회주의 국가간 및 한-소관계의 국교정상화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를 비롯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중 한-베트남 관계도 경제 교류에서 점차적으로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그동안 첨예한 적대 관계였던 북한-미국 관계, 북한-일본 관계의 개선으로 냉전해체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체제와의 힘의 우위를 통한 '공존'의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의 압력은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술적 방략인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세력은 동북아의 긴장완화 평화정책의 추세를 자신의 영향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틀내에서 기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이전의 소련을 견제한다는 명분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절대 우세한 일본과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를 견제하는 전략을 펼 것이며 그들의 이해득실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반도 정책에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소멸과 동시에 부각되는 자국내의 경제력의 침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관계로 영향력에 필요한 수준으로 동북아 지역에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군사기구의 재편을 통해 감축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증액시킴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비용은 더 적게하고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크게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전시지원국협정」으로, 일본과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과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진 배치, 쌍무적 안보협정등을 기반으로 핵우산 정책과 핵확산 방

더 적게하고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크게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전시지원국협정」으로, 일본과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과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진 배치, 쌍무적 안보협정등을 기반으로 핵우산 정책과 핵확산 방지를 통해 핵안보를 내세워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일본 중국등의 위협 내지 도전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 합의서의 채택의 배경과 의의

탈냉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국민들의 통일 열망은 고조되어 왔다.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구조적인 배경에는 이러한 냉전 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작년 9월에 있었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나 가을부터 급진전된 남북 고위급 회담은 12월 13일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채택과 이어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이루어졌다. 바야흐로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네 기본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국 통일 3대 강령(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계승하고 있으며 통일에국 역량이 일관되게 견지하여 온 「반전평화노선」, 「반미자주노선」이 관철되어 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상대방 체제 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 및 중상 금지, 파괴 및 전복행위금지, 남북 상호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등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합의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것으로 민족 자주성의 원칙과 통일 지향의 방향에 서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평화 공존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상화의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역사적인 문건이며, 이 합의서의 채택은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20년이라는 긴 시간만에 남북사이에 통일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다. 특히 합의서 내용중 「불가침」선언 부분은 온 겨레가 염원해오던 불가침 선언에 버금가는 것으로 남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협정체결의 일정을 단축했다는 뜻이 크다.

또한 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남북한은 「공존-상호인정-선의의 경쟁」시대로 돌입했다. 내정 간섭을 않고 체제 전복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은 남북의 신뢰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남북대립이 지역분쟁으로 번질 불씨를 제거했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이 체결한 최초의 공식문서라는 형식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서 채택 이후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언초에는 남북한이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 수락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분단 45년만에 남북관계에 이와같은 새로운 진전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며 통일을 위한 민족적 노력에 근거한 것이다. 합의서 채택이라는 통일문제 해결의 진전을 가져온 원동력은 7천만 민중의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는 것이다.

합의서의 채택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합의서의 채택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

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일운동의 표준로 삼아 조국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의지를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집약하고 통일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민족 공동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문제 해결의 담당자는 우리 민족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미국은 합의서 채택 직후 주한 미군의 감축은 없을 것이며 남북 사이에 냉전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남북이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약속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자 틴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는 등 긴장 완화의 몸짓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한반도의 주인인 것처럼 부당한 간섭을 자행하던 미국은 실제 주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되자 개입 명분을 잃게 된 것이다.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의 힘의 논리보다는 남북 합의서가 더욱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세째, 민족의 통일의지와 희망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혹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했다.

3. 앞으로의 전망

남북 합의서는 동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적 흐름의 반영이며 그 성격상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아니나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주요 전제들을 담고 있는 합의서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 합의서가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투쟁의지를 집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권은 민족의 통일 열망을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권력 재장악을 모색하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한 재집권의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민족 민주 통일 세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창구단일화, 통일 문제의 정부 독점이라는 구시대적인 정책을 고수하며 통일 논의를 차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자당은 통일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올 것이다. 이와같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영구집권음모에 활용하려는 노정권의 기도를 폭로 저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변화된 정세속에서 노태우 정권이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대신 권력의 재창출을 위하여 통일 논의를 독점하고 범국민적 통일 논의를 왜곡함으로써 대선에 이용하려는 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노정권은 합의서와 부합되는 국가보안법 철폐나 진정한 군축실현 보다는 제한된 남북 교류나 인적 교류를 우선시 하는 데 집착 할 가능성이 높다. 노정권은 경제 정책을 포함한 국내 정치의 명백한 실패와 임기후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처한 난관을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기만적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노정권의 정략적 이용기도는 남북 합의서 채택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통일 문제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마땅히 범민족적인 합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아니하고 요식 절차화 하여 통일 문제를 독점하려고 하는 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의 열망에 부응하고 그 성과를 확보해 내도록 하기위

하여 민족 구성원의 통일 의지의 결집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남한에서 그들의 안정적인 기득권이 보장되는 권력을 창출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고립화 전략과 굴복 전략을 병행하는 속에서, 한반도의 민족적인 단합과 화해를 가로막고 군사적 개입의 여지를 계속 남겨둘 것이다.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인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사실상 봉괴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할 때 제국주의의 지배력을 더욱 손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태도를 보건데 남북 화해의 기운이 높아져갈 수록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되리라는 가능성은 여러 기회를 통해 주한 미군 추가 감축 불가, 주한 미군 계속 주둔이라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합의서의 채택이 일정한 테두리를 넘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할 것이고 평화통일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입할 것이다.

4. 통일의 원칙과 방안

1) 원칙

통일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할 것은 한민족 자주적 통일이어야 한다. 자주적 평화 통일은 바로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은 바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는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반세기에 걸친 조국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실천적 결론이기도 하다.

대미의존의 청산이 곧 통일 운동의 고양이라는 등식으로 요약되는 바, 주한 미군의 철수는 당면한 민족 통일 운동의 진척을 빠르게 할것이다.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미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자주적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합의서 채택으로 간섭 명분이 약화된 현시점에 민족 대단결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며 이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기본 전제인 동시에 실현 방도이기도 하다.

우리민족이 통일을 이루어야하는 당위성은 하나의 민족이 단결하여 번영된 조국을 이루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민족구성원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요구를 찾고 이것을 중심으로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통일 주체들간에 통일방안에 대한 공유는 통일역량의 집결과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데 중심점이 될 것이며 민족구성원간의 계급적 처지나 사상·정견·신앙·거주지역·생활 양식·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를 민족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운동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계급적 적대감이나 배타성이 아

나라 민족적 포용력이다. 민족 구성원 내부의 여러 차이나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통일 실현에 대한 민족 공동의 이익과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 친지를 만나고 싶거나, 전쟁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거나 외세의 간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민족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조국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상호 양보하고 포용하는 자세에서 윈윈하게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우선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의 교류와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 통일 문제에 대한 통일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해 나가야만 통일을 위해 손잡고 나가야할 동반자 관계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이 냉전적 질서에 편승한 제국주의의 분할에 기인한 것이기에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민족 자주를 이루고 사상과 정권 계급적 차이나 체제의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서로 반목 질시하지 않는 민족 대단결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민족적 이해가 다른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써 조국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계각층의 통일 운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연대의 강화와 통일에 대비한 각계의 대안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한 통일 문제의 핵심과제는 합의서의 조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실현하는데 있다. 합의서의 이행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남북간에 신뢰에 입각한 군축에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 협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건이 되는 것은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축의 문제이다. 이는 남북간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며 앞으로 남북 관계 진전에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다. 핵문제의 타결과 팀스피리트 훈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이지만 이는 남한 정권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군사 지배력 및 군산 복합체의 경제적 구조에 따르는 이해와 얽혀 있어 쉽사리 진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2) 방 안

합의서의 이행의 단초가되어야 할 것은 먼저 국가 보안법의 철폐와 통일인사의 석방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살펴보면 합의서의 기본 정신과는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 법은 합의서가 남북 주민의 자유왕래와 접촉을 막고 있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상대방을 좋게 말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국의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남북간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국의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현 정권이 통일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합의서 채택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합의서에 부응하는 악법을 폐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법제정과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적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방안에 있어서는 남북의 사회·정치·문화·언어·제도·체제·이념등이 이질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체제를 흡수 통일하려는 것은 매우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통일 방식은 흡수 통일 방식보다는 연방제 통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이 각자의 내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민족 전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남북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중앙 통일 정부를 세우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체제 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식이 아닌 이상 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선다면 연방제 통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 제 1 장. 국내외의 정세와 통일운동의 방향 ▶

이에 우리의 당면과제로서 합의서의 신속한 이행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의 철폐, 통일인사의 석방, 군비축소등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주춧돌이 될 합의서의 이행추구와 더불어 합의서의 정국이 가져온 전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여 합의서의 내용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 평화의 실질적인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에 통일운동의 진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 문제의 정략적 이용 저지이다.

노정권의 기만적인 통일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 저지하고, 합의서 이행과 법적인 실현 보장책을 마련토록 촉구한다.

둘째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통일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통일 운동 탄압 중지와 구속 통일 인사의 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노정권의 창구 단일화 논리를 깨고 다각적인 남북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섯째 미국등 주변 강대국의 분단고착화 음모의 저지와 실질적인 군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지대화, 주한 미군 철수등을 포함한 평화체제 보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 제시등의 실천이 요구되며 더불어 통일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그 주체형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민주-반민주의 대결이자 통일-반통일 세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선거 활동중에 반민주세력의 반통일적 음모를 폭로하는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단결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으로의 일보 전진이나, 아니면 지배 권력의 정략적 이용이나는 전민족 구성원의 통일,평화를 위한 실천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반도의 비핵군축을 위하여

1. 핵무기없는 지구는 요원한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는 인류문명뿐 아니라 지구 자체를 몇번씩이나 끝장내고도 남을 정도라고 하나 이러한 핵무기를 완전폐기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급속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동서 냉전구도의 와해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으로 나타나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중국은 1메가톤급의 지하 핵 폭발실험¹⁾을 실시하였고, 이에 미국은 지하 핵폭발실험 제한협정(150kt이하로 제한함)의 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미국보유 핵무기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핵실험을 계속해야 한다.” (체니 미국방장관)며 “우리는 현재 핵실험 횟수를 크게 줄인 상태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현 수준을 변경시킬 계획이 없다.”(피츠워터 대변인)²⁾라고 하였다. 또한 NATO는 전쟁발발시 종전을 앞당기기 위한 핵무기 선제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전략안을 마련했으며, 세계도처의 지역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도 핵무기 개발(계획)이 경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즉,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체제 대립 및 제국주의 국가간의 주도권경쟁, 선진-후진국사이의 갈등과 인종, 민족, 종교분쟁 등등 ‘안전판 아닌 안전판으로서’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공멸의 지름길인 핵무기의 그늘로부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로서 가장 첨예한 체제간 대립을 지속해온 이 땅 한반도에서 최근 비핵화 공동선언 등 일련의 진보적, 긍정적 조치들이 취해져 왔는 바, 이의 추이가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핵무기의 경쟁적 개발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냉전체제의 해소와 남북통일이라는 시대사적 요구가 어떻게 교차되어 나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1)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신예 전투기, 탱크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각종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를 기하고 있다. 이는 인권문제등으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고, 외화 획득을 위해 무기판매에 나선 러시아와 사정이 맞아 떨어져 대 러시아 무기구입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지난 5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실험을 제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지하 핵폭발 실험횟수를 연 6차례에서 3차례로 축소하는 방안에서, 오는 95년까지 사실상 핵실험을 중단하는 광범위한 계획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피츠워터 대변인은 이를 후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2.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1)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

이제 민족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의 장을 열게 될 것인가? 작년 12월 13일, 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계기로(이하 합의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합의서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수준을 넘어 남북한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남북상호공존, 선의경쟁시대를 선언하였고, 특히,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의 기반이 된 '불가침' 부분은 평화협정체결의 전도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의 핵무재 선언과 북한의 핵재처리-농축시설의 폐기제안 및 미국의 팀스피리트 유보-시험사찰수용의 함수관계를 따라 북한의 한 걸음 양보를 배경으로(비핵지대화 원칙의 수정) 비핵화공동선언³⁾이 채택되었다. (1991.12.31)

이렇게 급진전된 상황의 배경으로는,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 이후 핵무기의 통제, 관리의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힘의 공백상태를 한-미-일 군사동맹의 주도로 채우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걸프전 이후 입지가 강화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북한에 대해 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폭격설을 퍼뜨리며 핵사찰 위협을 강화해 왔고,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무장해제라는 측면과 남한, 일본 및 중국 등의 핵개발 능력의 포기 또는 핵군사화 가능성의 폐기라는 측면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냉전적 세계질서의 선봉 역할에서 세계의 야경국가(?) 정도로 머무는 전략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⁴⁾ 팀 스피리트 유보-핵사찰 수용 카드를 제시하는 선심을 보였

3) 비핵화 공동선언의 대강은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핵에너지 평화적이용' '핵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6개항임.

4) 지난 3월 8일자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미국방부 94-99회계년도 국방계획 지침에 미국의 신세계 전략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지침의 요지는 구 소련의 영토나 기타 지역에서 부상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적의 출현을 막는 것, 즉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 세계 유일 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던 미국은, 세계 정세의 변화(EC 블록화, 일본-독일 부상, 중국 등 제 3세계 중심의 반제동맹 결성 움직임)로 전략의 대폭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미국은 분쟁이 핵 미사일 확산, 생화학 무기 사용에 이를 정도의 지구적 규모의 위협이 아닌 한 군사개입을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체니 미 국방장관이 승인한 신전략 문서에서 보이듯이, '미래의 모든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막는다는 당초의 목표를 폐기하고 분쟁해결에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 문서는 또 집단적 군사행동 방침을 지키고, 강대국간 균형유지를 위한 군비감축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미국방부-CIA의 강경노선인- 세계정세변화 및 미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문제들과 맞물리면서- 신임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특기할 것은 북한이 IAEA의 시험사찰을 수용함에 따라 강경론 일색이던 미국내 여론이 분화되고 있으며, 행정부내에서도 의견대립(국방부-국무부)이 나타났다

다.

이에 비하여 남한 정부는 다가올 권력 재편기의 안정적 지배구도 정착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정지작업으로서, 그리고 포괄적인 대북 흡수통합전략에 따른 북한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포석의 의미로서 비핵협상에 임하였다. 또한 북한은 외교력의 수세속에서 미군 핵철수, 팀스피리트 유보 등 현존하는 위협의 제거를 통해 원활한 권력 승계와 체제안정을 기하며, 경제난 해결 및 서방과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다.

2)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지난 3월14일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구성, 합의된 핵통제공동위원회는 핵사찰의 구체적 일정, 방법 및 절차 등 사찰 규정의 타결이라는 난제를 떠맡고 출범하였으나, 사찰대상 및 부속합의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⁵⁾ 남한측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강제)사찰⁶⁾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영변 핵시설과 남한내 모든 미군기지의 동시사찰을 주장하는 북한측과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결국,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사찰규정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고, IAEA의 대북 임시사찰의 일정이 개시(5월25일부터 2주간)됨으로써, 6월중 남북상호사찰이라는 당초의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다.

한편,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0일 대북 임시사찰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영변 핵시설이 실험용으로 보기에 그 규모가 크다”(길이 180m의 5층 건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정밀사찰도 하지 않은 현단계에서 이를 재처리공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과 남한정부의 입장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주장과 함

는 점이다.

5)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북측 주장	남측 주장
사찰 대상	핵기지	군사기지
사찰대상의 수	의심동시해소원칙 (동시전면사찰)	상호동수원칙 (특별강제사찰)
기타	부속합의서 채택 주장 (비핵지대화원칙을 담음)	

6특별사찰은 정기사찰과 달리 어느 일방이 24시간 이전에 사찰실시를 요구 하고 상대방은 접수후 6시간 내에 사찰반을 안내해야 하는 제도이다. 남측은 북측에 연간 정기사찰 16회, 특별사찰 40회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게, IAEA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다른 ‘비밀핵시설’의 존재여부에 주목하여 남북상호사찰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IAEA가 원하는 어떤 건물도 자유로이 사찰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밝힌 상태에서, 수주 후에 실시 예정인 IAEA의 추가사찰까지 수용하기로 한 북한당국과 계속적인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간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긍정하게 하는 제반 여건들이 존재해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남한에 상주하는 핵무장된 군사력으로부터의 위협,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고립화 격화 및 소련의 핵보호 상실 등으로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군사력에 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 무기의 개발이 필요했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해오고 있는 바, 우리의 주된 관심은 미국측의 태도 변화에 쏠리게 된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화에 동의를 해야 함이 마땅한데 패권주의적 관성에 젖어있는 미국은 ‘제3세계 반미국가’인 북한만의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북한이 핵시설을 포기하거나 핵무장의도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입증한다 해도,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⁷⁾ 이것은 무력 제재를 실제로 상정하던 미국의 강경책이 다소 수그러 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유지,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IAEA의 임시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남북한간의 상호(특별)사찰만을 강력히 고집하고 나서는 한편 새로운 대북 압력카드로서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⁸⁾

3. 한반도의 비핵군축의 길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지해온 냉전적 무한군비 경쟁은 이제 국가 총예산의 30%에 이르는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낳았다. 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한 전쟁역지란 최악의 방법이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곧, 이에 대한 남북사이의 공감각이 합의서 및 비핵화 선언으로 표출되었다고

7)미-북한간의 항시적 적대관계는, 미국측에서는 두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 (사회평론 5월호, 리 영희씨 기고문 참조). 그 하나는 ‘신세계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목표였고 또 하나는 미국이 한반도와 관계를 맺은 1945년 이후 북한에게서 입은 크고 작은 상처(정신적)의 누적으로 생긴 PTSD적 정신 이상 상태이다.

8)지난 4월 15일 미국무부는, 조-미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기존의 5개항외에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5월8일 게이츠 CIA국장은, 북한이 시리아, 리비아 등에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다른 나라가 찬동하고 있는데, 북한만이 미사일 관련기술 수출 통제협약(MTCR)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미사일 확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여부야 어떻든간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결이 예상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다.

현재 한반도의 핵문제는 IAEA의 핵사찰을 개입시킨 채 고착국면에 빠져 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상호사찰의 실시를 통해서, 남한미군기지의 핵부재 증명과 북한 핵시설의 의혹해소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 제 1항("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접수,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에 혼재되어 있는 비핵지대화론적 요소(즉 저장, 배비, 사용금지)를 전면화시켜내어, 비핵화선언자체의 한계-핵무기의 반입금지 대신 접수금지라고 하므로써, 미국의 NCND정책이 온존된 상태에서 남한내 핵무기의 유무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북한의 자위적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 소지가 있다-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냉전의 유물인 핵무기의 원천은 제 3자인 미국이지만, 이제 탈냉전의 시대에 그 핵무기를 철거할 권리는 바로 당사자인 남북한에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북공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위한 민족자주적 반외세적 태도가 어느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남한정권의 경우 실질적으로 비핵지대화 논의를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미국으로부터의-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의 경우도, 이미 IAEA사찰을 통해서 핵무기 부재의 실질적 증명에 가까와 진 이상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안의 타결에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요구되는 비핵군축의 핵심적 내용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시키는 미국의 패권적 한반도 지배질서를 척결해 내야 함과 동시에 남북한간의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전쟁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가 비핵지대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분단의 고착화와 위기상황을 지속시키는 물리적 힘으로서 작용하는 주한 미군및 그 핵무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며, 남북간의 신뢰조성및 군비의 감축을 위해 휴전협정을 시급히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인의 반핵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전망

두 차례에 걸친 비핵평화군축 보건의료인대회-명칭이야 어쨌든-와 각 보건의료단체의 반핵평화 관련 분과의 활동은 보건의료인들 사이에 반핵, 평화, 통일의식을 확산, 심화시키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반핵평화통일이 보건의료인의 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민족의 통일, 평화운동의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보건의료단체의 활동 자체가 대중적으로 널리 전개되지 못하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에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불감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조건 때문에 반핵평화통일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과 실천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입니다. 활동의 내용은 구체적이거나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며, 통일적인 이념의 정립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 회원들의 열렬한 호응과 참여도 없다는 것이 현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확산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의 실천을 되돌아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4년간 해 왔던 우리의 시행착오를 평가, 반성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추수하는 일은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통일운동이 알찬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통일활동

1)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의 모색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를 위한 관심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양심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이 만들어 지는 시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의협의 발기취지문을 보면 왼쪽피해자들의 고통을 거론하는 등 반핵의 과제가 보건의료인들의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보건의료단체는 창립과 함께 반핵평화,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분과 내부의 연구와 학습, 핵문제와 관련된 강좌를 만드는 등 초보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인의협의 경우 교회여성연합회가 주도한 왼쪽피해자실태조사와 보상책 마련 사업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1989년 여름에는 전남 영광 무의아사건을 계기로 광주지역의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영광 원전 주위의 초보적인 설문조사와 진료사업을 시행했으며, 1989년 10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IPPNW 9차 세계 총회에 몇몇 간부가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¹⁷⁾

전체적으로 89년까지의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은 초보적인 모색의 단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보건의료단체의 분과수준에서 활동의 준비와 연구작업이 대부분이었고 그 활동을 담당할 사람도 적었고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각 보건의료단간의 조직적인 연대사업 부재한 가운데 보건의료인들이 목소리를 모아 대사회적인 발언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보건의료인의 반핵평화활동의 원칙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 반원전문제에 집중한 감이 있으며, 각 단체의 분과에서도 환경문제와 평화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2. 「'90년 한반도의 반핵과 군축을 위한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치면서

90년에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은 IPPNW 지역회의의 공동 참여, 「'90년 한반도의 반핵과 군축을 위한 보건의료인대회」, 반반분과(반핵반공해분과 연대모임)의 형성 등 각 단체간의 연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보건의료단체의 회원들은 9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린 IPPNW 아태지역회의에 공동참가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핵무기를 반대하는 한국의 보건의료인들(Korean Health Workers against Nuclear Weapons)」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 참가단은 인의협, 건치, 건악, 청한 등 보건의료단체 회원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회장에서 한국의 핵문제와 보건의료인들의 반핵 노력에 대해 발언하였고, 필리핀의 진보적인 의료단체인 M.A.G.(Medical Action Group)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대회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세계적 중요성과 이를 풀어 나갈 주체로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제 3 세계의 보건단체와의 국제적 교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대회의 공동 참여와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 각 단체의 반핵평화분과가 확실히 정립되고 그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 9월에는 인의협이 제안하고 각 단체의 반반분과가 실무를 준비한 「'90년 한

17. 당시의 활동은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의 첫걸음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원폭피해자문제의 경우 당시 사업의 초점이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에 맞추어짐으로써 보건의료인들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무엇보다도 그 사업에 대한 참여가 개인 몇몇에게만 맡겨짐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전남 영광 원전 주변 마을에 대한 진료와 설문조사는 “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들의 집단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의 시작이었지만, 당시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은 그 결과의 홍보 과정에서 원전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보건의료인들이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과학성과 당파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세째, 일본에서 열린 IPPNW 총회의 참여는 냉전이데올로기가 횡횡하는 속에서 반핵반전평화운동의 조그만 움직임도 용인치 않았던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계에 범세계적인 보건의료인들의 평화 노력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외의 평화단체와의 교류나 IPPNW에의 조직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 제 3장. 보건의료인의 반핵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전망 ▶

반도의 반핵과 군축을 위한 보건의료인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90년의 보건의료인대회는 애초에 인의협이 제안하기로는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반핵과 군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는 최초의 자리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사정에 의해 이후로 연기되면서 학생들과 공동 주최의 형식으로 그 해 9월 22일에 열리게 됩니다.

대회 당일 대회 장소 홍사단 강당에는 학생을 포함하여 500여명이 모여 들어 한반도의 반핵과 군축평화, 통일에 대한 보건의료인들의 열기와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한반도의 반핵과 군축을 위한 보건의료인 1990년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선언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은 미군 핵무기의 즉각 철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평화협정과 남북상호불가침선언,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쟁연습 중지와 군비감축,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인들의 공동 노력 등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원칙적인 방향성과 입장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회는 또한 공동의 주제를 갖고 기성의 보건의료단체와 계열별 학생조직이 최초로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90년 보건의료인대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회 자체는 공식적으로 8개 보건의료단체와 계열별 학생조직으로 이루어진 대회추진본부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내용적인 준비와 실무는 각 단체의 반반분과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반반분과원들은 대회의 준비와 진행 과정 속에서 반반분과 연대모임이라는 틀을 갖추고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자료집의 발간과 같은 실무작업을 책임졌습니다.

내용적으로 90년 보건의료인대회는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원칙의 마련과 함께 “핵”문제에서 핵무기와 원전을 분리하여 통일, 평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반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반핵군축평화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한반도의 반핵군축평화운동은 분단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결합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 보건의료인대회가 큰 의의가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평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대회가 선언적인 행사로 그친 감이 있으며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통일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보건의료인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 둘째, 대회의 실무자와 각 보건의료단체의 상층 운영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사전에 각 단체 회원들 사이에 대중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세째, 대회 이후 반반분과 연대모임은 유지는 됐으나 양과 질 면에서 발전하지 못했고 후속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90년 보건의료인대회의 이러한 평가는 91년 보건의료인대회의 준비과정 속에서 극복의 과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90년에는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들의 상당수가 6·25 전쟁 40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진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과 ‘평화군축협의회’에 참여하였고,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는 통일운동의 민간주도성 확보를 위해 단체 명의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각 단체 내에서 집단적인 토론을 거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개인적 참여였고, 후자의 경우 다분히 형식적인 것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3. 「한반도의 핵무기와 전쟁을 반대하는 '91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치면서

◀ '92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토론회 ▶

90년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치면서 반핵평화통일은 산재추방, 의료보장과 함께 보건 의료운동의 영역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명백히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91년의 서두를 장식한 걸프전은 우리 보건의료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군 의료진이 전장에 동원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의 대응은 신속하지 못했지만 1월 보건의료단체 공동 주관의 예비보건의료인을 위한 공동수련회에서 “페르시아 만 전쟁에의 군의료진 및 군수송단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선언”으로 보건의료인들의 반전의 의지를 모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 보건의료단체의 내외에 파급효과는 적었습니다.

91년에도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었고 반반분과 연대모임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은 담당하였습니다. 반반분과 연대모임은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과 상호 의견 교환하는 지속적인 모임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계에서 반핵평화통일과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내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의료계 내부의 독자적인 반핵평화활동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 가운데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상반기 활동은 외부의 반핵평화단체와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 3월 31일 창립된 「반핵평화운동연합」에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주도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1000인선언”과 “남북불가침선언체택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보건의료계를 대표하여 실무활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러한 외부 평화단체와의 연대사업은 보건의료계 내부에 계속적인 문제제기의 의미는 있었으나, 반핵평화통일의 과제를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대중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신속하고 대표성 있게 수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핵평화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보건의료계에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일종의 실무그룹인 반반분과 연대모임이 받을 수 밖에 없던 처지에서 사업의 처리 속도가 늦었고 그 책임의 향방과 수준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반반분과 연대모임은 외부 연대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대중적인 프로그램도 고민하였는데 그것은 90년 보건의료인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 ‘91년 보건의료인대회」를 개최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91년 보건의료인대회는 90년 대회의 일회성, 선언성을 극복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그 해의 초기부터 계획되었고 6월 25일을 전후한 대회 개최를 각 보건의료단체에 일찌기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초기 계획은 제안 당시 각 보건의료단체의 사정과 언론의 핫이슈로 떠오른 폐놀오염소동에 대한 대응이 전면에 떠오르면서 수정, 유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과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반핵평화통일의 문제를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반해 반반분과 연대모임이 이름에 걸맞게 반공해,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의 차이였습니다.

이후 대회 취지를 공유하는 반반분과 연대모임과 학부간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초기의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계획은 91년 하반기에 남북동시핵찰문제가 제기되고 남북유엔가입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 평화정세가 고양되는 속에서 9월 28일 “한반도의 핵무기와 전쟁을 반대하는 '91 보건의료인대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91년 보건의료인대회는 대회의 내용적 통일성과 대중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대회 사전 프로그램을 강조하였고, 그 일 계기로서 9월 16일 간담회¹⁸⁾를

18. 간담회에서는 정세분석, 91년 보건의료인대회의 후속사업, IPPNW 소개와 서울대회

개최하여 예상 외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간담회는 대회의 홍보는 물론이러니와 대회 전반의 내용적인 점검과 후속작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1년 보건의료인대회에서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반핵평화활동과 관련된 논의¹⁹⁾가 제기됐으며, 92년 서울에서 개최될 IPPNW 아태지역회의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주체적인 참여 결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회 의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었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91 광주·전남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91년 보건의료인대회는 기념품과 반핵선언문 판넬의 제작 등 대중적인 작업 전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유사한 결의대회 형식의 답습 속에서 결국은 90년 보건의료인대회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간담회의 개최와 후속작업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반핵평화통일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속작업에 대한 논의 역시 원칙적인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회 이후에 이루어진 활동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적인 빈곤은 반핵평화통일의 과제를 각 보건의료단체의 회원들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고 이러한 일상활동의 부재는 반핵평화활동 실무자들의 원활한 재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반반분과 연대모임이 보건의료단체의 연대사업을 추동하기에는 그 성격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위상입니다. 즉 분과의 협의체라는 틀 자체는 아무리 실무만 담당하든 치더라도 보건의료단체의 연대사업을 책임있게 진행시킬 주체는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반분과 연대모임이 중심이 되어 대회의 추진본부를 꾸리는 등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보건의료단체의 연대사업을 책임질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더욱 힘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반핵평화활동을 주로 해 온 반반분과 연대모임에 참석하던 각 단체의 분과 또는 담당자가 91년 보건의료인대회를 기점으로 자기의 중심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명칭과 주제에 분명한 통일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평가 속에서 대회 이후의 주된 논의는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조직적 재편 또는 보건의료인 반핵평화운동의 조직 주체 건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²⁰⁾ 이러한

개최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19. 91년 보건의료인대회와 그 이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대회 이후의 사업의 원칙과 91-92년 공동사업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이 반반분과 연대모임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회 이후의 사업의 원칙으로는 1)대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킨다, 2)반핵군축의 이슈에서 평화통일운동으로의 수위를 높혀 나간다가 제기되었고, 보건의료단체 및 보건의료계열합부 91-92년 공동사업계획으로는 다음이 제안되었습니다. 1)서울에서 열릴 IPPNW 아태지역회의에 주체적으로 참여, 2)보건의료인 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 3)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실시, 4)각계 각층의 통일운동과 연대, 5)남북불가침선언, 군비축소, 적대적 군사훈련의 중지,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촉구, 6)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7)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인의 공동 노력, 8)북한바로알기운동의 전개.

20. 반반분과 연대모임은 91년 보건의료인대회 이후 10월에 각 단체에 띄운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통일운동의 조직적 주체 건설에 관하여」라는 제안서 속에서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통일운동을 맡을 새로운 조직의 건설과 관련하여 첫째, 기존의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강화, 둘째, 공동대책회의, 세째, 새로운 과제 단체 등 세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 '92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토론회 ▶

논의는 아직까지 잠정적인 결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핵평화활동을 해 오던 실무자들은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직형식에 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92년의 보건의료인대회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치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시기도 6월로 앞당기고 그 규모도 축소한 「토론회」의 형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결의가 아닌 변화된 정세 속에서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통일활동의 원칙적인 방향을 잡아보고,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맥을 짚어 보는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전망

1)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활동의 전망

관심있는 보건의료인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 각 보건의료단체 내에 관련 분과를 세우고, 2차회에 걸친 반핵평화 보건의료인대회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보건의료인의 반핵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미약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92년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철거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보건의료 제단체의 대중화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면서, 반핵평화통일의 관심은 예년에 비해 더 낮아진 감도 보입니다.

그러나 통일과 평화라는 전민족적 과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결코 도외시킬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은 분명하며 또한 보건의료운동의 대중화와 결코 양립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선 양심적인 보건의료인이라면 조국의 군사적 위협과 분단체제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이 평화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평화, 통일운동에 대중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핏줄이 서로 적대하는 조건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반핵평화통일활동은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핵무기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며, 그 성과가 민족의 건강과 복지에 쓰일 재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운동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통일과 평화문제에 보여 준 보건의료인들의 무시할 수 없는 관심과 열정, 진지한 태도가 보건의료인들의 반핵평화활동의 충분한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물론 통일, 평화문제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심각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통일, 평화는 일반적인 보건의료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정치성이 농후하고 보건의료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찾지 못한

그 중에서 둘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각 단체 내부의 토론 결과 둘째안은 기각되고 기존의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역량을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안으로 정리되었고, 그 모임의 과제와 명칭, 독자적인 활동의 수준 등은 대표자회의와 연대모임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 제 3장. 보건의료인의 반핵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전망 ▶

점과 지금까지의 경직되고 답보적인 활동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건의료인들에 걸맞는 반핵평화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찾고 활동방식의 개선 속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통일, 평화의 결의와 열정을 다시 한번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반핵평화활동의 원칙적인 언급에 머물던 수준에서 보건의료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원폭피해자문제에 대한 재조명,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조사, 일본의 핵무장화와 태평양전쟁의 재조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송환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내용을 적절하게 선전할 매체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부문에서 반핵평화통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선전지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핵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은 물론 기왕의 반반분과 연대모임을 계승한 것으로 과제와 명칭이 명확히 합의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보건의료단체에서 반핵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일정정도의 역량 배분과 그를 순조롭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고, 학부와의 연대 속에서 학부로부터의 원활한 재생산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²¹⁾

총선 이후의 변화된 정세 속에서 통일, 평화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각계각층에게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 천명과 그것을 위한 활동이 요구될 것입니다. 양심적인 보건의료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그것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IPPNW 서울대회라는 계기가 중간에 놓여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양심적인 보건의료계의 입장이 미리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제 3차 IPPNW 아태지역회의의 서울개최에 대하여

제 3차 IPPNW 아태지역회의의 서울개최가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참여의 문도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하면 KPPNW가 준비한 회의의 내용은 원래의 회의 주제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핵지대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서울회의가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북한의 핵위협론을 국제 사회에 과장하여 선전하고 압력을 넣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군축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군의 핵우산정책이나 한국정부의 군비증강정책을 은폐하고 나아가 남북간의 화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의 적대분위기는 선거를 앞둔 현 정부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민주정부 수립의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반도의 통일, 평화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세우

21.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로는 중기적으로 보건의료내부의 새로운 과제 단체의 전망을 갖는 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모임에는 반핵평화통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존의 반반분과 연대모임의 활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다른 평화단체와의 연대사업에서도 독자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92 보건의료인 반핵평화토론회 ▶

고 서울회의를 맞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서울회의의 기간동안 국내외에 제대로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서울회의의 내부에서 하는 것과 외부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KPPNW의 추이와 각 보건의료단체의 사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은 보건의료단체의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동의 준비와 그를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

22. 인의협의 경우 서울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발표할 연자도 정하지 못하는 등 단체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교류나 홍보, 남북의사와 민남, 대국민 홍보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참여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